# 교육부 "조선대 개방이사 3명 포함 이사 8명 빨리 선임"

## 임기만료 이사회에 촉구 … "안뽑으면 임시이사 파견"

### 1명은 가처분결정 후 진행

### 분쟁 적극개입…향후 조치 주목

### 이사회 "조만간 대응 모색"

교육부가 임기 만료된 조선대 이사회에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8명의 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히 조선대의 현 상황을 '이사 부존재' 상태로 규정하고, 조속히 이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결원이사 몫으로 뽑힌 신임이사인 조선대 총동창회장의 경우, 최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만큼 이번 결원이사 선임에서 제외하고, 본안소송 결과 이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대 총동창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나온 교육부의 첫 공식입장이어서 향후 조치와 이사회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3일 조선대 이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현재 결원 상태인 이사진의 후임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전달됐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임 이사 1명과 임기만료 이사 8명 등 모두 9명의 후임이사 중 8명을 조속히 뽑을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 1명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선임한 총동창회장과 관련,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본 뒤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대학자치기구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방이사 3명의 선임도 후임이사 선임 시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선대 이사회가 이사 전원의 임기가 끝난 이사 부존재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라는 점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어서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입장과 관련,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 총동창회가 총동창회장의 신임이사 선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이사회 반응과 학교 측의 대응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기 이사회 일정에 따를 것인지 신속히 임시이사회를 열 것인지를 논의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결원이사 선임 사태**

▲9월30일 - 조선대 이사회,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
▲10월25일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0월17일~11월14일 - 법인이사 문제해결 위한 조선대구성원 회의 및 집회
▲11월28일 -광주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12월2일 -교육부, 개방이사 포함 결원이사 선임 조속 촉구 공문 발송

**즐거운 하루** 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경찰 엇갈리는 교통행정

## 전남경찰 -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3개월 만에 중단

## 광주경찰 - 유명무실한 교통정보안내전화 7년째 운영

경찰 교통 정책이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음주 사고 감소에 효과를 본 '음주운전 신고보상제'를 중단한 반면, 다른 한쪽에선 유명무실한 '교통정보안내전화'를 없는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다.

◇"돈이 없어서"=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했던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3개월 만에 중단했다.

제도 시행 전(2012년 327건)에 견줘 음주사고가 시행 후 290건으로 11.3%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중단한 데는 시범 사업이라는 것 외에 예산 부족이 한몫을 했다. 전남청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적용, '범죄신고 보상금'을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전남청은 그러나 한정된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 인해 3개월간 51건의 신고에 대해 건당 3만원씩 153만원을 지급한 뒤 중단했다.

◇돈이 남아돌아서?=광주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가 운영하는 교통정보안내전화(1644-5000) 서비스는 지난 2006년 9월 이후 7년 째 운영중이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외면받은 지 오래다.

교통정보안내전화(1644-5000)는 시민들에게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전화로,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CCTV를 보면서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교통상황을 확인해 알려주고 있다. 비나 눈으로 인한 통제·위험 구간 안내도 하지만 홍보 부재 등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루 평균 안내 실적은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광주청 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이 이 사업을 유지하겠다며 국회에 올린 내년 예산도 12억75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靑행정관 '채군 정보 확인 고맙다' 문자"

###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

### 청행정관은 "사실무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요청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 국장은 3일 오전 서초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11일 조 행정관이 문자로 (채군의) 주민번호와 이름, 본적을 얘기하며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해주고 이틀 뒤인 6월 13일에 조 행정관 측에서 '고맙다'고 문자가 와서 '밥 한 번 먹자'고 답을 보냈다고 조 국장은 말했다.

그러나 조 행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국장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은 "조 국장과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한 적은 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문자메시지로 그런 것을 물어본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이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조 국장이 주장한 지난 6월11일은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공식화한 날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는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수사팀 의견대로 선거법을 적용하기로 결론낸 것이다.

/연합뉴스

# 경찰대학장 안재경·부산청장 이금형

경찰청은 3일 서울경찰청장에 강신명 사회안전비서관, 경기지방청장에 최동해 대구청장을 승진 발령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이인선 인천청장, 부산청장에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금형 경찰대학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경찰대학장에는 안재경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경찰대 2기인 강 서울청장 내정자는 새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경북청장, 경찰청 정보국장·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 5명밖에 없는 고위직이다.

이번 인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경찰대 2명(강신명·이인선), 고시 2명(안재경·최동해), 순경 공채 1명(이금형) 등 출신 배경이 고르게 배분됐다. 또 출신 지역별로도 전남(안재경), 서울(이인선), 충청(이금형), 경북(최동해), 경남(강신명) 등으로 균형을 맞췄다.

안재경 경찰대학장은 장흥이 고향으로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시 31회에 합격해 경정으로 특채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광은 전 LG감독 자수

야구특기생 입시비리에 연루돼 지명수배를 받아 오던 프로야구 LG 트윈스 전 감독 이광은(58)씨가 도주 9개월 만에 검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고양이 죽인 풍산개 주인에 벌금형

**쌍나팔**

○…맹견인 풍산개를 풀어 고양이를 물어 죽이게 한 4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담양에서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 5마리 중 수컷 2년생 1마리와 산책하면서 목줄을 풀어 주인이 없는 고양이를 공격해 죽이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

○…당시 박씨는 풍산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고, 문제의 동영상을 본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는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고발.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